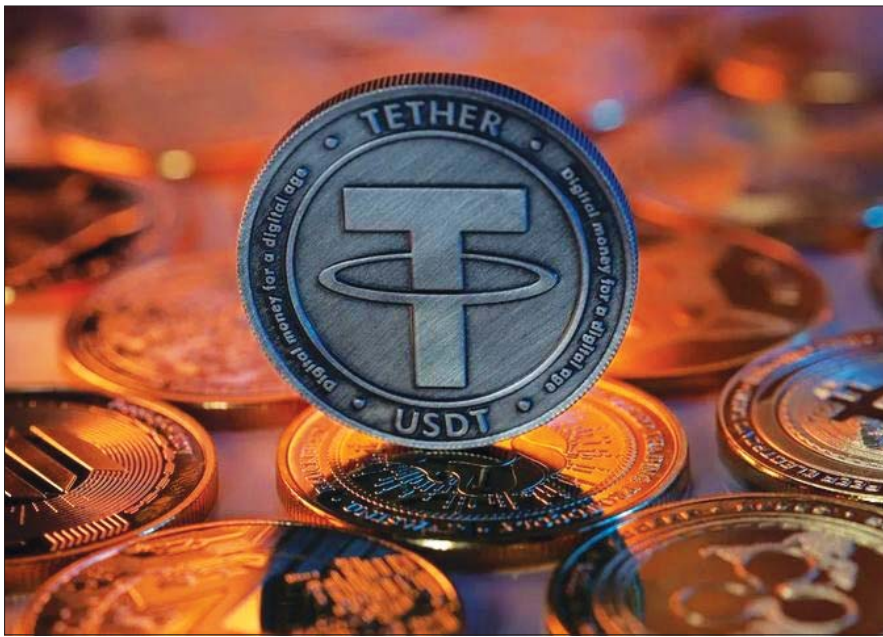


연내 ‘가상자산 제도화’ 무산 위기… 선진화 입법 제동

정무위 법안 17건 모두 제자리
금융위 주도 2단계 법안 미제출
오는 12월 9일 국회 정기회 종료
원화코인 두고 당국 이견 지속
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표명

정치권의 주요 정책목표였던 ‘가상자산 선진화’에 제동이 걸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 논의와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입법 시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0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11건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5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7건의 법안 모두 정무위에 입안·상정됐을 뿐,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은 한 건도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선진화’와 관련한 법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연내에 관련법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뉴시스

없다.

정부 주도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선진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관련 논의가 내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입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효력을 발

휘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마치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법사위 심사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기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통상 정기국회종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주최되는 만큼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를 비롯해 입법 과정을 원점부터 재시작하게 되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산업 환경은 관련 법안의 부재로 사후 규제 등을 우려하는 등 다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이 늦어진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IMA·발행어음 ‘무늬만 모험투자’ 경고

금감원, 여의도서 C레벨 간담회
설계·사후관리 완전판매 체계 주문
모험자본 25% 공급 의무강화

금융당국이 새롭게 IMA(종합금융투자계좌)·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에 대해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clawback)까지 포함한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공동 1호 IMA 사업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키움증권(CFO·CRO·CCO·운용담당 등 C레벨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IMA·발행어음 업무가 자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만 허용되는 계좌로,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

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회사채·대출 등 기업금융 투자처를 확대할 수 있어 업계 최대 관심사로 꼽혀왔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보는 “부동산 중심의 비생산적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종투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의무비율 충족을 위한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 모험자본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A·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2028년까지 스타트업·벤처 등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은 각사 CRO·CFO에게 조달·투자·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 체계를 기존 대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 부원장보는 “2022년 하반기 부동산 PF 위기가 보여주듯 특정 자산군 몰림은 증권업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로 번

질 수 있다”며 “단기 조달 비중이 큰 IMA·발행어음의 만기 구조와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상시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을 대상으로는 완전판매 절차 구축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작동되도록 성과보상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조했다.

당국은 앞으로 한투·미래와 함께 TF를 구성해 신규 IMA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잠재적 문제를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투자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한다.

참석한 증권사 관계자들은 “종투사에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유동성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스피 5000, 장기투자 인센티브 필요”

상장협, 장기투자 법개정 촉구
단기쏠림 확대로 장기전략 약화
장기보유자 우대제 강화 필요성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 대상 복수의결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은최승재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장기매매보다 단기매매 위주의 거래가 활발하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투자·회수 시점의 경영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은 장기

연구·개발(R&D)을 포기하고 단기 주가 부양에 매몰된다고 짚었다. 주주 중심 경영이 강화될수록 단기매매·정보열세에 놓인 진짜 개인투자자는 소외되고 기관과 투기세력만 득세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첫번째 과제로 장기보유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장기보유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과제는 주식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콤, 금융사기 ‘24시간 안전망’ 구축

증권업계 공동 금융사기 대응체계
야간·휴일도 24시간 지급정지 운영
보이스피싱 대응 기능 지속 고도화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콤 통합콜센터가 자본시장의 ‘24시간 금융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증권사 공동 인프라로 출발했으며, 금융사기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금융소비자 지킴이’로 성장했다.

20일 코스콤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적 기준 코스콤 통합콜센터의 사기계좌지급정지 건수는 약 1만건, 일반 문의를 포함하면 10만건 이상에 달한다.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대응 체계 강화 요청에 따라 증권업권 전반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탄생했다. 당시 증권사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감원이 증권업계에도 은행권 수준의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코스콤은 개별 증권사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공동 통합콜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2014년 10월 개발에 착수해 2015년 2월 정식 가동된 통합콜센터는 20개 증권사로 시작해 현재 30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금융투자업계 대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금융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통해 즉시 자금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력을 향상



코스콤 본사 전경.

했다.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은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이 직접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30개 금융투자회사가 이용 중이며, 영업시간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코스콤은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제도 변화에 맞춰 통합콜센터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2023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개정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자 관련 기능을 신속히 개발해 대응 체계를 정비했으며, 2024년에는 선불업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의무 신설에 따라 관련 기능을 추가 개발, 사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코스콤은 앞으로도 상담 인력 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반복 테스트 등 상시 운영 품질 관리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